

서삼석 “청와대 등에 알뜰주유소 대책 요청”

대금 정산 기준 이전 3사 손실 1천억 ↑ 판매가격 인상 지속시 국민 부담 전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 의원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천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삼석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문수 ‘채용공고시 임금정보 공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8일 “채용공고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를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도, 천일염 가격 하락 대응 모색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천일염 가격 하락과 인력난에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관계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천일염 소비 촉진 ▲수출 확대 전략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중국 자매·우호 교류 도시를 활용한 수출 확대와 소금 특화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사용 전환과 저장창고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영근 수산유통과공과장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행정통합 제1차 인사조정위원회의.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과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7일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제1차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장질서 교란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히 차단”

김민석 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 “중동사태 오리무중...모든 시나리오 염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이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면서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이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안정반은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채권·자금지장 안전 프로그램도 필요시 즉각 실시할 방침이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의 아웃리치(대외 접촉) 강화와 흥해 통합 지원을, 민생복지반은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개호 “희귀질환, 완전한 건강권 보장돼야”

혈우병 환자 건강권 보장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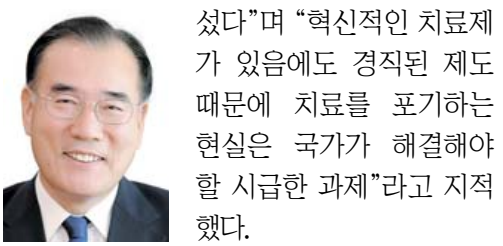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혈우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2천200여명의 혈우병 환자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출혈의 공포와 통증 속에서 일상을

사투처럼 버텨내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신체장애로 내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의 몸에 직접 주사바늘을 꽂아야 하는 부모의 절실함과 가혹한 고액의 치료비 부담은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섰다”며 “혁신적인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직된 제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 소수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돼선 안된다”며 “혈우병 등 희귀 질환에 대한 정책의 지향점은 단순한 보조를 넘어 ‘완전한 건강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